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 연 성 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음 2월 18일) 제1766호 대표전화(063)288-9700

정부, '가축방역세' 도입 긍정 검토

축산농가 · 생산단체 '뿔났다'

"가축질병 발생 책임,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것" 반발
농경연, "방역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위해 도입해야"

가축질병 예방 및 보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축산 농가에게 부담시키는 가칭 '가축방역세' 도입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농가 및 축산물 생산자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가축방역세 도입 방안 검토를 요청했고, 농경연은 최근 '가축방역세 도입 방안 검토' 자료를 내놨다.

농경연은 자료를 통해 가축방역세는 가축질병 방역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되는 목적세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축방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소, 돼지, 닭, 오리의 경우 가축 도축 시, 산란계와 젖소는 계란, 원유 출하 시(1안), 축산법 상 축산업허가제에 신고 된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2안) 중 한 가지를 검토하되, 소득이 발생한 이후 세금을 부과하는 1안이 바람직하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1안의 경우 가축 도축 당시 소유자 및 계란, 원유 판매 시점의 소유자가 가축방역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율은 2011년 폐지된 도축세와 동일한 10/1,000로 설정했으며, 1안으로 세금을 부과했을 때 도축마릿수와 도축 당시의 가축 시가로 추정한 가축방역세 규모는 2016년 기준 1,762억원이 된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67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가당 추정 세액은 돼지 1,000마리 미만 사육농가 320만원, 1,000~5,000마리 미만 1,469만원, 50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6,415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가축방역세를 납부한 농가에게만 일정기준에 의해 살처분 보상금·살처분 비용·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해야 하며, 세수가 남았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방역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가축방역세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가축방역세 도입은 가축 질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또 다른 방안이나 다름없다"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하는데 정부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이 각종 제한과 부담만 지우고 있다"며 "농가만 질병 발생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농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전체 축산 농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축산 농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의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축산 농가들과 정부 간에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용 기자

1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사)사람과 미래 주관, 민주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후원하여 열린 '혁신도시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사람과 미래 김성주 이사장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람직한 전북혁신도시 육성 방향 논의

▶ 사람과 미래, '혁신도시 시즌2' 토론회

"지역 인재채용률에서 공공기관 여건 따라 차이 커
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바람직한 전북혁신도시 육성전략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14일 (사)사람과 미래는 14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혁신도시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권영섭 국토연구원과 김동영 전북연구원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 2전략',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발전전략'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또 김성주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농촌진흥청 박교선 연구정책과장, 국민연금공단 최희정 창의혁신전략부장, 국토정보공사 이세원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전북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전북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은 농진청, 축산연구소, 식품연구원 등 농축식품 정부기관이전으로 농식품생명산업, 바이오산업 비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이전으로 인한 금융(허브)도시 비전 그리고 국토정보공사 이전으로 국가공간정보산업 비번이라는 세 개의 축이 있다"며 "이들 공공기관 이전 효과와 혁신도시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섭 국토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 재평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와 혁신도시의 역할, 산업전략으로서 혁신도시의 미래, 2단계 혁신도시 전략 등 제시했다.

권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조성사업 측면에서 분양률이 91.5%에 이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지역 인재채용률 측면에서는 공공기간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345명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채용은 93명(27%)에 달했지만 강원도 1,549명 대비 142명(9.2%), 울산 295명 대비 29명(9.8%), 전북 512명 대비 75명(14.6%)로 조사됐다.

권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조성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가 대도시 도심이나 기 개발지내 건물형태가 아닌 신도시개발 형태이거나 대도시 외곽, 중소도시 외곽 지역 등 기존도시나 KTX 등 연계교통망과 원거리에 입지해 있다"면서 정주여건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현황, 비전 및 전략, 농생명 허브, 제 3 금융허브, 공간 문화 지식서비스 허브, 추가사업 등 성장동력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농생명, 금융, 지식서비스 기관들이 전북도 민선 6기 도정운영방향과 일맥상통한다"면서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피의자 박근혜' 예우는 없다

검찰이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놓고 '어떤 조율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14일 나타냈다.

종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를 놓고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끌려 다니던 것과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날짜를 오는 15일 통보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소환날짜 통보를 앞둔 검찰 태도는 지난해와 완전히 달라졌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기소 특권을 잃고 '일반인' 신분으로 떨어진 현실을 제대로 실감하게 된 상황이다.

조사 일정에 대해 검찰은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도 한층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뉴시스

한국형 '방제8호정' 군산항 1부두서 취역

926km까지 항해 가능

대한민국 바다의 특성에 맞춘 한국형 '방제8호정'이 취역했다.

1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는 군산항 1부두에서 이병구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장, 김상겸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협회장, 시민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제8호정' 취역식을 가졌다.

해양경찰 노후함정 대체건조사업으로 취역한 '방제8호정'은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약 26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완공, 올해 1월 12일 군산해경서에 배치됐다.

'방제8호정'은 150t급의 중형 방제정으로 길이 34.1m 폭 10.8m 최대 13노트(kn, 약 24km/h)의 속력으로 926km까지 항해가 가능하다.

특히 기동성과 운항 안전성을 갖춘 추진시스템은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유출된 오염원을 빠르게 회수할 목적으로 선체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모양인 '쌍동선형' 선박이다.

한편, 앞서 30여 년간 운항했던 기존 방제정은 작년 12월 7일 운항 정지 됐다.

/군산=문정곤 기자